



[뉴스] SK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빈커머스 지분 인수 02



Economy

| | | | |
|------------|-----------------|-----------|----------------------|
| 코스피 | 3127.08 (+6.25) | 코스닥 | 968.63 (-1.14) |
| 금리 (미국 3년) | 1.181 (-0.021) | 환율 (원/달러) | 1119.60 (-8.10) (6일)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시

文 대통령, 재보선 후 ‘쇄신용 개각’ 무게

정세균 ‘대선도전’ 위해 사의 가닥 흥남기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용 개각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이 필요한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도전을 위한 사의 표명 가능성까지 생기면서다.

청와대는 재보선 이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후임 인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개각할지 결정되는 셈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의견을 종합하면 ‘재보선 이후 개각설’에 무게

가 실린다. 이번 재보선이 ‘정권심판론’ 성격을 띠고, 관련 여론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개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오른 인사는 ‘시한부 유임’ 상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한 지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 가까이 된 문성혁 해양수산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전셋값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이후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31일 이호승 정책실장(전 경제수석), 안일환 경제수석(전 기재부 2차관),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전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전 경제정책비서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전 기재부 예산실장) 등 김 전 실장 경질에 따른 경제팀 개각 이후 추가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추가 쇄신이 이뤄지면 ‘검증된 익숙한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흥 부총리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통, 구 실장의 경우 정통 예산통으로 꼽힌다.

(2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비싸고 잘 안터져요” 무리한 상용화 지적

5G 상용화 2년

<下> 품질 불만 여전

5G 통신분쟁 조정 128건 달해 가입자 등 시민단체 5G 보상 시위 “정부 무리한 상용화 알고도 방치 이통사 감싸주기만 급급” 비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2주년을 맞았지만 품질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에 변화를 이 끌어왔지만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글로벌 품질 조사기관에서도 한국의 5G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고, 5G 망구축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항변했다.

◆5G 최고 수준이라는데...소비자 불만 팽배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CA)에 따르면,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들은 한국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리서치 기업 옴디아는 한국이 22개 주요 5G 상용 서비스 제공 국가 중 가장 앞서 있다고 밝혔고,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5G 글로벌 상위 10개국 현황에서 한국은 전송속도·커버리지 부분에서 1위로 평가했다. 미국 리서치 업체 스피드체크에서도 5G 다운로드 평균속도 측정 결과 한국이 429메가비피에스(Mbps)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타이틀 아래 소비자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상용화 2주년을 맞이했지만, 5G가 비싸고, 안

터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G 요금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며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상용화를 강행하고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통사를 감싸주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네이버카페 ‘5G 피해자 모임’은 5G 서비스 가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는 ‘건물 내부 5G 커버리지’를 지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는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16조2000억원으로, 2017년~2018년 대비 149.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지난 구축된 5G 기지국은 3월 기준, 35만7000식으로 5G 상용화 초창기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인당 데이터 트래픽으로 비교하면, 5G가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해 오히려 단위 데이터당 요금은 LTE보다 저렴하다고 항변했다.

(6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당신의 선택은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 뉴스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전액 돌려줘라”

NH투자증권 판매 펀드 분쟁조정 2건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라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미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3면>

금융투자상품분쟁조정기문데 계약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의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가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펀드의 피해자는 개인 884명과 법인 168명이다. 지난달 26일까지 NH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이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6일 코로나19 확진자 478명... 이를 연속 400명대
▲ 4.7 재보궐 방송3사 출구조사 오후 8시 15분 공표 / 사진 뉴스스

▲ 서울·부산 민심은 어디로... 민주당 연승 행진 제동 거나
▲ 코로나19 사망자 4명 늘어 누적 1752명... 위중증 112명



▲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 전북경찰, LH직원 친인척 소환
▲ 바이든 2600조원 인프라법, 일단 청신호... 조정권 허용 / 사진 뉴스스